



5부제 첫 날... 우왕좌왕 하루 다갔다

Q 르포 | 마스크 팔다 지친 약사, 사려다 지친 소비자

#.오전 7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 A약국 앞에 50m의 긴 줄이 늘어섰다. 줄을 선 사람들은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81세라고 밝힌 김씨는 "이렇게 줄을 서도 2개 밖에 못사지만, 일을 나가느라 그나마 줄도 못서는 자식들을 위해 왔다"고 했다. 9시 약국이 문을 열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약사는 "마스크는 오늘 오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1·6년생은 미리 신분증을 준비해주시고, 사실분만 밖에서 대기해주세요"라고 했다. 추위에 지친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약사는 "마스크가 언제 오는지 우리도 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사과했다. "번호표라도 나눠달라"는 제안에 약사는 "나라에서 번호표를 나눠주지 말라고 했다"며 손사래를 쳤다.

◆나아진건 전혀 없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마스크 구매 대란을 줄이기 위해 9일부터 '마스크5부제'를 시행했지만 기다림과 실망은 여전했다.

서울 중구의 약국에 근무하는 허씨는 이날 오전 "마스크가 아직 입고 되지 않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도 이전과 같다"며 "구매 대기 줄은 여전히 길고 나아진건 하나도 없는데 마스크가 왜 없냐는 문의만 10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마스크구매가 여유로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신분증을 챙겨 나온 시민들도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지병이 있다는 이씨(63세)는 "정부가 5부제로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해서 몸이 아픈데도 왔는데 또 허탕을 쳤다"며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나와 이렇게 추운데 줄을 서는데 정책자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마스크 도착시간 약국마다 상이 아침부터 대기했는데 오후 도착 대기자 불만 고조...약사에 '불뽕' 모호한 가이드라인 혼란 부추겨

마스크 판매로 다른 업무 마비 자비로 대기 자동 시스템 도입 대리구매 헛점 속속 나오기도

정부가 5부제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몇 차례 변경하면서도, 약국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혼란은 가중됐다.

O약국 약사는 "정부가 약사들에 공지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기 전에 뉴스가 먼저 나온다"며 "대리구매는 관계 증명이나 신분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복잡하데, 소비자들이 따져도 우리가 제대로 아는게 없으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C약국 약사는 "엄마가 자신의 마스크를 사고, 아이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려면 두번 줄을 서야하는지, 한번에 아이 뒷까지 살 수 있는지도 공지사항이 다르다"며 "2011년생 아이 여권을 들고와서 연도만 확인하면 살 수 있는거 아니냐고 우기기도 하는데, 약사들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몰라 서로 묻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팔다 하루가 다가

공적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모두 약사들의 몫이 됐다. 마스크 수량 부족으로 인한 분노가 약사에게만 향하는 탓이다.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 서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을 찾은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C약국 약사는 "매일 마스크가 배달되는 시간도, 몇개가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만접수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한다"며 "입구에 아무리 써붙여봐도 갈수록 화가 나는 소비자들의 폭언과 욕설이 심해져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5부제 시행 후 업무는 더욱 가중됐다. 마스크 판매로 다른 업무는 마비되는 일이 다반사다.

G약국 약사는 "일일이 고객들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것도 번거

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잘못 알고 온 고객들에 설명해 돌려보내고, 줄 서다 돌아가는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O약국 약사는 "마스크만 팔다 하루를 다 보내지만 마스크 한장에 고작 200원 남는다"며 "카드 결제하면 그마저도 안납고, 다른 처방은 잘 받지도 못하니 손해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막기 위해 살길도 강구해야 한다. 인천 소재의 동네 약국은 줄을 선 사람들을 위해 대기 노트를 만들었다. 마스크 구매자들이 약사가 건넨 노트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으면 마스크 입고 후 연락해 판매한다. 중구에 한 약국은 카카오톡과 연계해 마스크 입고를 알려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약사는 "매번 줄을 선 고객들의 항의를 감당하기 힘들어 자비를 들여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약국에는 손해지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소분 판매 위생 '경악'

마스크 소분 판매도 첫날부터 큰 문

제가 됐다. 5매씩 묶여 포장되는 마스크를 약사들이 소분해 2매씩 판매하면서 위생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정부는 전일 소분포장용지와 2개 포장 마스크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약국 약사는 "마스크를 소분할 때 위생을 위해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공지를 받았다"며 "비닐장갑이 위생을 얼마나 지켜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중구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김모씨는 "약사가 박스에 쌓아놓은 마스크를 핀셋으로 집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줬다"며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구입하는 마스크인데 이렇게 배급을 받으니 불안감이 되레 커졌다"고 지적했다.

소분포장도 약사들 업무를 과중시키는 요소가 됐다.

G약국 약사는 "오늘 새벽, 마스크를 하나하나 포장을 뜯고 2매씩 따로 포장했다"며 "국가에서 포장지나 장갑을 지원해주지도 않아 온전히 약국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세경·조효정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국내 제약·바이오社, 코로나 백신 개발 착수 금융권, 무이자 대출 등 전방위 지원

GC녹십자·셀트리온 등 15개사 백신·치료제 개발에 민관협력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정부 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며, 4곳의 정부기관도 자체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예방 백신의 경우, 독감백신 등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GC녹십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책 과제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돌입했다. 백신개발은 서브유닛 방식(단백질을 활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며,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에서 발현하는 단백질 중에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유전자재

조합 기술을 활용해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치료제는 확진자의 혈액에서 B세포(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분리해 코로나19의 치료용 항체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이후, 재조합기술을 활용해 단일클론항체치료제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국책 과제 공모를 통해 신종 바이러스 백신의 생산, 공급, 상업화 과정을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출시했던 의약품에서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셀트리온은 국내 의료기관서 혈액공급받아 치료용 단일클론 항체 개발에 나섰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제를 중증폐렴 진행 억제제로 활용하는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셀리버리는 중증폐렴증 치료제를 활용하며, 이문메드는 인플루엔자 치료

제로 개발 중인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에 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민관협력도 이어졌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방역에 필요한 신속진단제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근 8개 연구 과제를 공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에 더해 유럽의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IMI), 미국 국립보건원의 AMP(신약개발 촉진협력) 등 민·관 협력이 활발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개발 완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의약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1면 '소상공인 경영자금'서 계속

농협·기업·신한銀, 신협 등

또 지난 6일부터 소진공 센터를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신보에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 직원 70여 명을 파견해 보증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재단 인력을 한시적으로 총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자체적인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보증심사를 간소화하는데 주력 중이다.

국책·민간 은행들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기존 담보대출 이차지원 ▲공제료 납입유예 ▲약관대출 이차 납입유예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긴급금융지원에 나서 이달 5일 기준 긴급자금대출 90억원, 상환유예 579억원을 지원했다.

농협은행은 영세관광사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긴급자금을 마련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속 여신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본부에는 '신속 여신지원반', 영업점에는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존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무제표 결산이 늦어져 올해 신용등급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피해기업들을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속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하이패스(Hi-Pass)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본점 심사역의 권한을 영업점장에 넘기고 부득이 본점이 심사할 때도 이를 내에 마무리하는 제도다.

/김희주기자 hj89@